

대형조선사 난파 위기, 대선 표심 요동칠 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상반기에 문을 닫기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5월 조기 대선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빅3' 조선사의 직원 감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만4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거 실업자 양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선산업이 민심, 경제에 폭풍의 핵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위기설을 맞이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6월 잠정 폐쇄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그 중심에 있다. 영남권 대표 조선사인 대우조선은 5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회생을 위해 최대 3조원대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는 오는 6월 가동 중단과 함께 사실상 잠정 폐쇄를 앞두고면서 지역 민심이 바다로 치닫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25만톤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독

정부, "직원 감원 규모 늘릴 것" 향후 대거 실업자 양산 불가피 (Dock)을 갖춰 그동안 한국 조선계의 자랑거리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영남권 대표 조선사인 대우조선에는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어가면서 최근 회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호남권 대표 조선소중에 하나인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는 오는 6월 문을 닫게 되면서 영호남간 차별적 지원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우조선은 오는 4월에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7월에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가 9400억원에 이르면서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 결국 정부는 대우조선에 다시 3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추가로 3조원대 자금으로 지원해 올 한해를 버티더라도 내년 조선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자칫 다음 정권에서 더 큰 부실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

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4월 회사채 만기를 넘길 만큼의 자금 지원만 한 뒤 5월 대선 뒤에 출범하는 새정부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파장은 전북도내 실업률을 더욱 치솟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지역 지난 2월 실업률은 이미 4.7%로 16년만에 최고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불황으로 6월부터 가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협력사 절반 가량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전체 근로자 2만6000여 명 가운데 조선업 관련 종사자는 6300여 명으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할 경우 어림잡아 4조원대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움직임에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산 조선소 폐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20일 도청광장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신형 올 뉴크루즈 생산을 축하하고 판매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범도민 구매 촉진 및 전시행사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군산에서 만든 신차 성공 판매 기원"

도-지엠 군산공장, 생산차량 범도민 구매 촉진 전시회 이등우 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올 뉴 크루즈, 올란도, 말리부 등 총 5종류의 차량이 전시됐으며 이중 신차로 처음 선을 보인 올 뉴 크루즈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송하진 지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기업으로 군산공장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지엠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차량의 안정적 생산 확보가 중요하며, 이번에 생산한 신차가 성공적으로 판매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정당별 대선주자들 전복으로 '총출동'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금주에 대거 전복으로 총출동한다.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행보는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원들과 전북도민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을 필두로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금주 전복을 찾아 '표심 얻기'에 나선다.

민주당-내일 안희정 이재명 동반 후보 나서 문재인, 23일 지지 호소

국민의당-오늘 손학규 안철수 등 대선 후보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오전 새만금홍보관이 있는 부안 지역을 둘러본 뒤 오후에는 전북도의회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또 같은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제와 군산 지역에서 잇따라 당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무주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우정연수원 개관식에 참석한 뒤, 남원 지역 머물며 당원 간담회와 시의원 오찬·공무직 근로자 간담회를 갖게 된다. 22일과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전복을 찾는다. 안희정 총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전복으로 동반 출격한다. 이들은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 후보적 입자'임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3일에는 문재인 전 대표도 전복을 방문해 전복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 탄소국가산단, 정부 예타대상 선정

시, 산단 조성규모 줄이고 업종 늘려 계획 수정 재신청 LH, 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에 예타의뢰서 제출키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예타대상)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가주도의 산단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일 시와 한국도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전주 탄소국가산단)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는 시와 LH 등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뒤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해 얻어낸 결과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오는 4월 중 KDI에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대한 예타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KDI를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I)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오는 하반기까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시와 LH는 지난해 각각 0.97과 0.44에 머물렀던 비용편익(B/C)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치인 1.0과 0.5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산단 조성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산단조성계획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가 기준치에 거의 도달했던 만큼, 올해는 예타조사가 반드시 통과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한 데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92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제출한 상태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